

선거 겨냥 '선심성 조례안' 봇물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조례안'을 무차별로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개최하는 제184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중 6건이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지원 조례'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적 남기기용'에 그치고 있고, 일부는 의원 자신과 관련된 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주진 의원(민주·북구)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여가·건강증진실비 사업비를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노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경로당 지원 사업은 자치구 업무다"며 "경

광주시의회 의원발의 9건중 6건 지원조례

입법 취지 좋지만 예산 수반 실효성 의문

실적 남기기·관련단체 점수따기용 비판도

로당 지원 근거를 시 조례로 명시화할 경우 자치구의 지원 요구가 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해령 의원(민주·동구1)은 지난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내놨다.

'가정복지 도우미'는 이웃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가정복지 도우미로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게 하는 제도로, 또 강박원 의장(민주·광산1)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진선거 의원(민주·북구

1)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호권 의원(민주·북구4)은 시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소속 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지원 조례'에 대해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담은 입법 취지는 좋지만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경찰서 김기홍 정책부장은 "입법 취지나 내용은 인정하지만 지원 조례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청회·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채 선거용으로 추진되다보니 졸속·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내일 개최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전남도의회는 16일 개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광주시의회 제184회 정례회가 10일부터 열린다.

다음달 23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광주시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종플루 대책, 돌 구장 및 신도시 건설,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이어 다음달 7일부터 22일까지는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16일부터 제245회 정례회를 열어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1,437억원 규모...우기 전까지 60%이상 준공키로

전남도는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2개소 1천 43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전에 재해위험 시설에 대해 90% 이상 조기 착공해 장마철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완공키로 했다.

조기 추진 전략으로 ▲올해 12월까

지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공사 조기 착공 준비완료 ▲조기 추진 기확단 구성 전담관리 ▲조기발주를 위한 예산성립 전 사용, 긴급입찰 등 각종 제도 적극 활용 ▲토공·배수펌프장·유수소통지장물 등은 우기 전 우선 시공 ▲조기발주 및 준공실적이 우수 한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또한, 내년도 공사추진 단계에서 동절기 공사중단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여름철 피해우려구간을 우선 시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선급금·기성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은 물론 재해예방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홍석대 건설방재국장은 "올 상반기에 70%이상 예산조기집행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내년도 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막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에 70%이상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도 우기 전까지 60%이상 준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미군 비행장 현내 이전 안된다”

日 오키나와서 반대 시위

일본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현재 미·일 정부 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현내 기노와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비행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 7일과 8일 잇따라 집회를 갖고 현내 이전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노와 해변공원에서는 8일 오나가 다케시 나하 시장, 이하 요이치 노와시장과 주민 등 2만1천여명(주최측 주장)이 참가한 가운데 '후텐마 비행장 현내 이전 반대 현민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13

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현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하 기노와시장은 "2차대전 이후 64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부담, 교통과 슬픔에 종지부를 찍을 영단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수계로 행정 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섬인 이오지마로의 이전을 주장했던 오나가 나하시장도 "현민이 단결해 힘을 합치자"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희생 영국군 추모 이고 있다.

8일 (현지시간) 영국 웨스트 민스터 대수도원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전쟁 희생자 추념식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담은 수많은 십자가들이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한미 FTA 메시지 주목”

오바마 美대통령 18일 취임 후 첫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19일까지 취임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등 다자 및 양자외교가 결합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집권 원년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 한국방문(18일)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등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 문제의 경우 현재 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지만 6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진전사항들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임박한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고, 한미 FTA는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체' 상

태를 타개해야 하는 양국의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 두 사안의 논의 방향이 조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베이다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재확인'에 방점을 찍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참모들에게 양측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며, 우리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토야마-노무현 외교 성향 닮은꼴?

대미 의존 탈피·동북아 공동체 중시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일 관계가 유례없이 파열음을 내고 경제에서도 구조개혁 노선이 후퇴하는 데 대해 "하토야마 정권이 한국의 노무현 전 정권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전했다.

신문은 이날 1개 면을 할애한 특집 기사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이유가 대미외교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과의 대등한 관계'를 제창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중·일 등의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미국과 중·러의 중간에 서느냐"고 반발했었다"고 소개했다.

결국 이는 한미 간 군사 협력에 영향을 줘서, 주한 미군이 감축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의 경우도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걸며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측에 쉽게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일본이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전 정권의 외교를 대미 추종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할 말을 하는 하토야마 총리의 접근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신문은 "반미 성향을 보이던 노무현 정권도 이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등 현실 노선으로 향했다"고 지적하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외교 노선 변화 여부를 주목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educational services. The text includes '국립학점' and '국립학점'.